

광주시, 청년 정책 271억·문화콘텐츠 336억 전남도, SOC 대폭 확충·농수산 1조 이상 투입

■광주·전남 예산 10조시대 ... 어디에 쓰이나

광주 4조398억·전남 6조3735억 통과 확정

광주시와 전남도의 2017년도 예산이 최근 시·도의회 심의를 통과해 확정됐다. 광주시 4조 398억원, 전남도 6조 3735억원 등 시도교육청을 제외하고 10조 예산시대를 맞았다.

광주시의회(의장 이은방)는 내년도 광주시 예산안을 4조398억원으로, 시 교육청 예산 1조7962억원을 의결했다. 광주시가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 4조416억원 중 18억원이 감액됐고, 시교육청 예산안은 29억원이 증액됐다.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시민참여예산 33건 58억원이 삭감됐으며, 자치구별 허부조직 구성으로 물의를 빚었던 자동차벨리추진위원회의 운영비는 요구액 4억5000만원에서 2억원만 반영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내년도 주요 역점사업으로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에게 구직지원금을 지급하는 청년드림사업 등 청년정책 사업에 271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오고 싶고 머물고 싶은 광주'를 만들기 위해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35억원, 첨단실감콘텐츠 70억원, 프리지페스티벌 15억원,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8억원 등 문화전당명 명소화와 문화콘텐츠 구축 사업에 336억원이 투입된다.

미래먹거리 발굴을 위해 역점 추진 중인 친환경자동차 클러스터 조성에 224억원, 에너지벨리 조성에 91억원이 사용될 예정이다.

전남도의회(의장 임영규)도 전남도의 내년도 예산안 6조3735억원, 전남도교육

청 내년도 예산 3조3496억원을 의결했다. 도의회는 전남도가 제출한 예산안 총 64억원을 삭감했다.

전남도는 내년도에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500억원) 등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418억원 늘어난 1767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쌀 소득 보전 직불

금(1838억원), 도서종합개발(711억원) 등 친환경농업 육성을 포함한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예산 1조5777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광·문화사업 육성과 스포츠 산업 활성화 분야에 3097억원, 서민생활 안정 등 복지·건강증진 분야 1조7851억원을 편성했다.

이밖에 교육여건 개선(1930억원)과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 지역개발 분야(6165억원), 주민안전(949억원), 쾌적한 환

경 조성(4424억원) 등에 예산을 사용할 예정이다.

전남도의 2017년 5대 주력 사업은 남해안 철도(임성~보성) 2211억원, 호남고속철도 2단계(광주승정~목포) 1460억원, 광주~완도 고속도로 1449억원, 새전년대교 988억원, 여수~고흥간 연륙교 604억원 등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성덕고 교정에 '작은 소녀상'

9일 광주시 광산구 수완지구 성덕고 교정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기리는 '작은 소녀상' 제막식이 열렸다. 학생들의 모금을 통해 만들어진 작은 소녀상은 폭과 높이가 모두 40cm이다. 왼쪽부터 조영남 성덕고 교장, 김수현 학생부회장, 김민용 학생회장, 양정기 시교육청 혁신교육과장, 백종복 성덕고 교감 등이 작은 소녀상을 살펴보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작은 소녀상을 만들어서 할머니들을 기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작은 소녀상을 만들어서 할머니들을 기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시의원 민간인 동반 외유 빈축

300만원씩 지원 받아

인도 관광지 등 방문 계획

광주시의원 일부가 민간인을 동반한 채 관광성 외유에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광주시의회 의원 5명은 해외 우수사례를 견학하며 19일 인도행 비행기에 올랐다. 4박 6일 일정으로 '의정활동 역할 강화'를 위한 해외 우수사례 비교견학 출장'이 명분이다.

일행은 인도 델리, 뭄바이, 아그라를 둘러본다. 코트라와 인도고교조사단, 스포츠타지조사기관, 기숙학교 방문 등 공식 일정은 4개 정도며 나머지는 대부분 관광성 프로그램으로 짜여졌다.

민간인 2명과 수행 공무원 1명 등 8명에게 들어간 여비는 2100만원이다. 민간인들은 시의회 정책 자문기구인 정책

네트워크 위원으로 전직 시청 공무원 등이다. 이들에게는 민간인 국외여비 300만원씩이 지원됐다.

예초 시의원 8명이 갑 계급이었으나 비단 여론을 의식, 3명은 불참했다. 민간인 동행과 관련해 구체적인 선정기준이나 자격 등이 없었다는 지적이 내부에서도 나온다.

광주시의회는 이들이 민간인인 만큼 공무원 행동강령과 청탁금지법 등에 위배되는 않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시의회에 우호적인 민간인에 대한 일종의 특혜라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다.

특히 시의원들의 이번 외유가 탄핵정국의 한 가운데에서 연말 막판에 이뤄진 점도 비난을 사고 있다. 해외 넘기면 올해 편성 예산이 불용처리되는 점을 아까워해 급하게 외유를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전남행정심판위, 주민간 소송 화합으로 이끌어

나주 축사 약취 분쟁 해결

축사의 약취와 해충을 둘러싸고 벌어진 주민 간 소송전이 전남행정심판위원회의 끈질긴 중재로 원만하게 해결됐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나주의 한 마을에서 30여 년간 한우 축사를 운영해온 A씨가 지난 5월 중순 축사 부속시설(퇴비사) 신축 건축신고를 하자, 나주시는 5월 말 이를 허가했다.

지난 수십 년간 A씨의 축사에서 발생한 악취 및 해충으로 피해를 본 마을주민들은 나주시를 향의 방문하고, 6월 중순 민·형사 소송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마을 대표 B씨는 퇴비사의 건축허가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8월 말 청구했다.

심리에 나선 전남행정심판위원회는 허가 과정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동시에 지난 10월 갈라진 마을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위한 중재소위원회를 가동했다. 논의 끝에 중재소위는 A씨에게 신축 퇴비사는 참고 용도로 변경하고, 향후 악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소에 마을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다시 지을 것을 권고하면서 고소·고발을 취하려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A씨와 마을 주민들은 처음에는 조정안을 완강히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재위원들의 끈질긴 설득에 조정안은 지난 11월 마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지난 6일 행정심판 취하서가 접수되면서 7개월여 걸린 분쟁은 화합 속에 끝을 맺었다.

이외에 안희정 충남지사(4.3%), 박원순 서울시장(4.2%),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3.4%), 오세훈 전 서울시장(2.9%), 유승민 의원(2.2%)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반기문 총장, 박근혜정부 작심 비판

"한국 국민, 국가리더십에 대한 믿음 배반 당해"

외교협회 간담회 ... 새누리 친박과 동행 않을 가능성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최순실 사태'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상황 속의 한국을 '6·25전쟁을 제외한 최대 정치혼란'으로 규정했다.

특히 그는 "(한국) 국민은 '올바른 지배구조'(good governance)가 완전히 결핍된 것에 몹시 좌절하고 분노하고 있다"며 "국민은 국가의 리더십에 대한 믿음이 배반당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

통령의 통치와 비교하거나, 박 대통령이 자주 사용했던 '신뢰와 배신'의 용어를 등장시킨 것은 '박근혜 정부'에 대한 전면 비판으로 해석된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작심비판은 그가 귀국 후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 인사들과 정치적으로 동행하지 않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반 총장은 최근 미국 뉴욕의 외교협회(CFR)가 주최한 초청 간담회에서 연설한 후 질의·응답 과정에서 중국·북한의 위협

에 관한 질문을 받았으나, 답변에서는 현정국에 대한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반 총장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에 또 한 번 놀라고 있다"면서 "나는 70년을 한국 국민으로 살아왔지만, 우리는 한국전쟁을 제외하고 이런 종류의 정치적 혼란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1979년 시해된 그녀의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 때에는 한국인들이 격변의 과정을 헤쳐나오던 시기였다"면서 "그런데 지금은 평화롭고 매우 민주적이며 경제적으로도 어렵지 않은 사회인데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덧붙였다.

이어 '올바른 지배구조의 완전한 결핍'

을 거론하면서 국민이 4년 전 대선에서 선출한 '박근혜 정부'를 신뢰했으나 리더십 부재에 배신을 당했다고 믿는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

그러나 반 총장은 '한국민이 반 총장의 리더십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나는 아직 유엔 사무총장"이라며 "(퇴임일인 12월 31일까지) 유엔 사무에 집중해야 한다"며 답변을 피했다.

반 총장은 대선출마 문제만 언급하지 않을 뿐, 최근 정치적 함의를 담은 발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앞서 그는 유엔 출입기자단과의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형태의 포용적 리더십'이라며 '사회통합과 화합'을 내세웠다. 대선 출마 가능성이 있는 정윤찬 전 총리에 대해서도 "잘 아는 사이"라며 '제3지대' 협력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연합뉴스

문재인 23.7%-반기문 20.5% ... 오차범위내 각축

이재명 14.9% 상승세 주춤

리얼미터 2528명 여론조사

차기 대권주자들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오차범위 내에서 각축을 벌이는 가운데 탄핵정국 과정에서 급부상한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지율 상승세는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는 지난 12~16일 전국의 성인 25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1.9%포인트) 결과, 문 전 대표가 전주에 비해 0.6%포인트 오른 23.7%를 기록, 7주 연속 선두를 지켰다고 19일 밝혔다. 반 총장은 전주보다 1.7%포인트

오른 20.5%를 기록, 문 전 대표와의 격차를 다시 오차범위 내로 좁혔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3%포인트 하락한 14.9%를 기록, 최근 4주 동안 이어진 급등세를 마감했으나 3위를 지켰고,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0.3%포인트 반등한 8.3%로 소폭 상승세를 보였다.

이 외에 안희정 충남지사(4.3%), 박원순 서울시장(4.2%),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3.4%), 오세훈 전 서울시장(2.9%), 유승민 의원(2.2%)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60511-충-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학 최희석·정행진·김 신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서암로 392(월곡2동 679-3)